

제3섹터에서의 고용창출*

김혜원**

I. 서론

제3섹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원봉사, 취약집단에 대한 기여 등의 사회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비영리 조직이 국민경제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와 창출하는 고용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큰 영향을 준 것은 2006년 말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인 사회적 기업은 수익을 내면서 동시에 좋은 일도 하는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3섹터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관심의 증가에 대비하여 제3섹터의 실증적 측정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통계청의 통계수집이 주로 영리 부문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며 연구자들도 기존의 통계를 충분히 활용하여 제3섹터의 활동 수준 및 변화 방향을 측정하는 데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박태규·정구현(2002), 박태규(2006)는 한국에서 비영리 부문의 고용규모 추정과 관련하여 선구적이면서 거의 유일한 연구이다. 그 연구에서는 각각 1997년과 2003년의 한국의 비영리 부문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들 연구의 의의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심대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가 일반에게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다른 학자들에 의해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엄형식(2008)은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라는 유럽적 기원을 갖는 개념으로 한국에서 이 영역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검토하였다. 박태규·정구현(2002), 박태규(2006)가 비영리 조직에 한정된 반면, 엄형식(2008)은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회적 기

* 본고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08년 협동연구과제인 『제3섹터 부문의 고용창출 실증연구』의 일환으로 연구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hwkim@kli.re.kr).

업까지 포괄하는 보다 넓은 영역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엄형식(2008)에서는 전체 규모를 추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개별 조직형태별 조직의 수 및 종사자수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이에 따라 검토된 전체 조직형태를 합산한 것이 바로 한국의 사회적 경제 전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통계청의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 폭이 확대됨에 따라 제3섹터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이 공개하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3섹터의 고용규모를 추정하고 지난 수년간의 고용규모 변화의 추이를 다각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3섹터라는 개념을 채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제3섹터라는 개념이 비영리 부문과 사회적 경제 양자를 포괄하는 중립적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엇이 제3섹터이고, 무엇이 제3섹터가 아니라는 논점에 집중하기보다는 제3섹터로 포괄될 수 있는 영역들의 고용규모를 실증적으로 추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II장에서는 제3섹터의 규모 추정을 위한 제3섹터에 속하는 사업체의 식별기준 및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설명하고, 제III장에서는 2006년 기준 한국의 제3섹터의 취업자 비중을 다양한 기준으로 검토해 본다. 제IV장에서는 제3섹터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데 자료의 한계로 인해 주로 2001년 이후에 집중하여 검토한다. 제V장에서는 제3섹터 규모 변동의 다양한 특징들을 살펴보고, 제VI장에서는 요약과 향후 연구 방향을 담고 있다.

II. 제3섹터 사업체의 식별기준 및 사용한 자료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 관련 조사를 중심으로 제3섹터의 고용규모 및 변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어떤 사업체가 제3섹터에 소속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본 분석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을 영리 부문으로 보고 회사 이외 법인과 비법인단체를 제3섹터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체를 공공부문으로 간주한다.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 중에서 제3섹터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체가 존재한다. 영리 기업이면서 이윤 배분을 정관에 의해 제한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기업이 태동단계에 있으므로 그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고 제3섹터 추계에서는 제외한다.

회사 이외 법인과 비법인단체는 다종다양한 조직의 구성체이다. 회사 이외 법인으로서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있으며 특수법인으로서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이 포함된다. 각종 시민단체 등은 사단법인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비법인단체로 존재

하기도 한다.

쟁점이 되는 것은 협동조합류와 공공부문이다. 미국의 비영리 중심의 분류에서는 회원에게 이윤을 배분하는 협동조합은 제3섹터에서 제외된다. 이에 비해 유럽의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협동조합 중에서 농협, 수협, 축협 등의 생산자협동조합은 농림축산업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소비자협동조합 중에서 먹거리 유통을 담당하는 생협은 도소매업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생협은 의료업에 분포한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 관련 협동조합은 금융업에 분포하며 각 세부산업별 공제조합이나 산업별 협동조합은 회원단체에 분포한다. 주택 재개발조합은 부동산업에 분포한다.

공공부문은 법적 형태에 있어서 회사 이외 법인의 모습을 띠고 비영리 조직의 특성을 보인다. 이들 조직은 외형상 제3섹터 조직처럼 분류되지만 실제로 정부의 직접적 영향력 하에 있다. 제3섹터가 근본적으로 민간의 자발적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비중이 높거나 인력 배치 등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제3섹터로 분류될 수 없다. 공공부문에는 공기업도 있으며 정부 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 등도 존재한다. 이용가능한 원자료에서 개별 사업체의 명칭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 글의 분석에서는 우선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산업을 제외함으로써 협동조합이 포함된 제3섹터와 포함되지 않은 제3섹터의 규모를 별도로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주어진 자료에서 이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자료원을 기초로 해서 해당 고용량을 제외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제3섹터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조사자료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이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매년 연말 기준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조사에서 제외되는 사업체는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 국방업, 가사서비스업,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그리고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판매상이다.

조사 항목에는 종사자수와 조직형태가 포함되는데 조직형태는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 이외 법인, 비법인단체, 정부기관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조직형태 정보를 이용하여 비영리 조직을 구분해 낼 수 있다. 조직형태는 크게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 이외의 법인, 비법인단체로 구분된다. 개인사업체는 주로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말하며, 법인격이 없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회사법인이란 상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하며,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법인으로 상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지사(점), 출장소, 영업소 등도 포함한다. 회사 이외의 법인이란 민법 또는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농·수·축협, 각종 공사 등을 말한다. 비법인단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학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친목회, 종친회 등을 말한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정부 조직의 공무원도 포함되지 않았고, 1996년부터 공무원 근무기관이 조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0년까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체와 정부기관이 별도로 조사되지 않고 회사 이외 법인에 포함되어 분류되었다. 이 때문에 2000년까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을 구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2001년부터는 두 유형의 조직이 구분된다.

Ⅲ. 제3섹터의 고용규모

우선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의 고용규모를 살펴보자. <표 1>은 2006년 기준의 제3섹터 취업자수를 산업별로 보여준다. 전체 제3섹터 취업자수는 143만 명이며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의해 집계된 1,540여만 명의 총취업자 대비 9.3%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총취업자수는 2,315만 명이므로 이에 대비할 경우 6.2%의 비중을 차지한다. 농업인구를 제외하고 계산할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비농취업자 대비 6.7%가 제3섹터에 고용되어 있다.

<표 1>에는 제3섹터 취업자가 어떤 산업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산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교육서비스업과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각각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각종 회원단체가 밀집해 있는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이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비영리 금융기관이 모여 있는 금융보험업이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파트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 각종 재단의 부동산관리업 등이 포진한 부동산임대업이 6%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5개 대분류 산업이 전체 제3섹터 취업자의 78.7%를 차지하고 있어 제3섹터의 산업별 분포에 집중도가 매우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제3섹터가 밀집해 있는 산업과 총취업자 기준으로 취업자가 밀집해 있는 산업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전체 취업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취업자들이 몰려 있는 6대 산업은 제조업(22.3%), 도소매업(16%), 숙박음식업(10.8%), 교육업(8.1%), 사업서비스업(7.6%), 운수업(5.7%) 등이다.¹⁾ 교육업을 제외하면 5가지 산업은 제3섹터가 집중되어 있는 산업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기준 취업자 비율이며,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볼 경우 약간의 차이가 난다.

〈표 1〉 제3섹터의 산업별 분포(2006년)

(단위: 명, %)

	대분류기호	전체 취업자수	제3섹터	전체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제3섹터의 산업별 구성비
농업	A	25,708	18,994	0.2	1.3
어업	B	6,021	2,419	0.0	0.2
광업	C	18,466	2,858	0.1	0.2
제조업	D	3,435,491	26,418	22.3	1.8
전기가스	E	67,418	27,924	0.4	1.9
건설	F	845,339	7,926	5.5	0.6
도소매	G	2,468,173	31,257	16.0	2.2
숙박음식	H	1,661,782	6,081	10.8	0.4
운수	I	879,553	55,810	5.7	3.9
통신	J	140,178	993	0.9	0.1
금융보험	K	619,539	159,591	4.0	11.1
부동산임대	L	415,679	136,617	2.7	9.5
사업서비스	M	1,175,867	89,349	7.6	6.2
공공행정	N	538,799	0	3.5	0.0
교육	O	1,245,864	311,769	8.1	21.7
보건복지	P	696,150	306,387	4.5	21.3
오락문화운동	Q	376,990	36,515	2.4	2.5
기타공공수리	R	818,749	215,275	5.3	15.0
전 체		15,435,766	1,436,183	100.0	100.0

자료: 통계청(2006),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산업별로 영리 부문, 공공부문 그리고 제3섹터의 비중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총취업자를 기초로 하여 제3섹터의 취업비중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산업이 농업부문으로서 73.9%에 이른다. 농업부문에서 제3섹터 조직은 대부분 농림업협동조합이다.

그런데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는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농업인구에 비해 과소 측정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6년 현재 농업 부문의 취업자수는 172만 명이다. 이에 비해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는 2만 5천 명만이 조사되었다. 만약 경제활동인구조사 전체 취업자수를 감안하면 제3섹터의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만약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제3섹터 취업자수가 모두 측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비중을 계산할 때 분모를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한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표 2>의 마지막 열에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사업체가 아닌 개인 차원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이들이 많은 농업과 어업, 교육,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에서 제3섹터의 비중은 분모의 증가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표 2〉 산업 내 제3섹터의 비중

(단위 : %)

	대분류기호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기준			경제활동 인구조사 기준
		제3섹터 비중	영리 비중	정부 비중	
농업	A	73.9	23.0	3.1	1.1
어업	B	40.2	57.1	2.7	3.8
광업	C	15.5	84.5	0.0	15.9
제조업	D	0.8	99.2	0.0	0.6
전기가스	E	41.4	40.5	18.1	36.7
건설	F	0.9	98.8	0.3	0.4
도소매	G	1.3	98.7	0.0	0.8
숙박음식	H	0.4	99.5	0.1	0.3
운수	I	6.3	93.2	0.4	4.8
통신	J	0.7	65.2	34.0	0.3
금융보험	K	25.8	74.2	0.0	20.3
부동산임대	L	32.9	67.0	0.1	27.3
사업서비스	M	7.6	91.0	1.4	5.4
공공행정	N	0.0	0.0	100.0	0.0
교육	O	25.0	35.1	39.9	18.8
보건복지	P	44.0	51.4	4.6	44.7
오락문화운동	Q	9.7	83.9	6.4	7.3
기타공공수리	R	26.3	72.9	0.8	16.8
가사	S				0.0
국제	T				0.0
전 체		9.3	83.0	7.7	6.2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대분류 기준 가장 제3섹터의 비중이 높은 영역은 보건복지업으로서 44.7%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들이 제3섹터에 종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기가스업인데, 전기가스업의 경우 공기업의 인력이 대부분 제3섹터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광업의 경우에도 석탄공사의 인력이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7.3%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비중의 사람들이 제3섹터에 취업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보험업의 경우가 20.3%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 교육서비스업과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이다. 교육서비스업에서는 민간 학교법인의 비중이 크며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에서는 회원단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통신업 등에서는 제3섹터의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산업의 취업자 비중이 상당함에도 이 영역에서 제3섹터 비중이 낮으므로 제3섹터의 비중 증가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제3섹터의 고용규모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비교해 보자. 박태규·정구현(2002)에서는

1997년 기준 비영리 부문의 상용 피용자를 51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숫자는 비농 취업자의 3.17%, 소매업과 숙박업을 제외한 서비스 부문 고용의 9.3%에 해당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박태규(2006)에서는 2003년 기준 전일제 환산 근로자수로 58만 5천 명이 비영리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서비스 분야 총 고용인원의 9.5%, 비농 고용인원의 2.9%에 해당한다.

이와 비교할 때 2005년 기준 143만 명이라는 숫자는 지나치게 큰 값이다. 이 값과 박태규(2006)를 단순비교할 때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번째는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에 이윤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로 보지 않는다. 금융업에서 신탁, 새마을금고와 같은 조직에 취업한 이들도 143만 명에 포함되어 있다. 두번째는 부동산임대업에서 관측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이들에 의해 고용된 관리사무소 취업 인원이다. 이들이 제3섹터인지는 논쟁적인 이슈이다. 세번째는 공공부문이 대거 포진한 영역이다.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통신업의 인력 대부분은 공기업에 종사하는 이들로서 이들을 제3섹터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농림어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통신업을 제외한다고 할 경우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제3섹터 종사자는 108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총취업자 대비 4.7%, 비농 취업자 대비 5.1%에 해당한다.

추가적으로 비교할 것은 2007년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자료이다. 사업체근로실태조사는 노동부에서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임금수준을 파악하고자 매년 조사하는 근로자조사 자료로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기초로 사업체 표본을 추출하고 각 사업체의 근로자를 조사한다. 원래 사업체근로실태조사에는 사업체가 영리 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노동부의 협조를 얻어 본 연구를 위해 사업체 명부를 입수, 사업체가 공공부문에 속하는지, 제3섹터에 속하는지, 아니면 영리 부문에 속하는지를 알려주는 변수를 추가하였다.²⁾ 이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비영리 사업체 취업자 중에서 공공부문은 30여만 명으로 추정되며 협동조합이 25만 명으로 그리고 주민자치조직이 7만 3천 명으로 추정된다. 이를 모두 제외하면 제3섹터는 82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값은 총취업자 대비 3.5%, 비농 취업자 대비 3.8%이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제3섹터의 고용량은 박태규(2006)에서의 추정치에 비해 크다. 이에 비해 전승훈(2009)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2005년 제3섹터 고용 비중 추정치는 5.05%로서 본 연구에서 추정한 값과 비슷하거나 약간 큰 값이다. 단,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제3섹터 취업자의 표본수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수치를 해석함에 있어 유의할 바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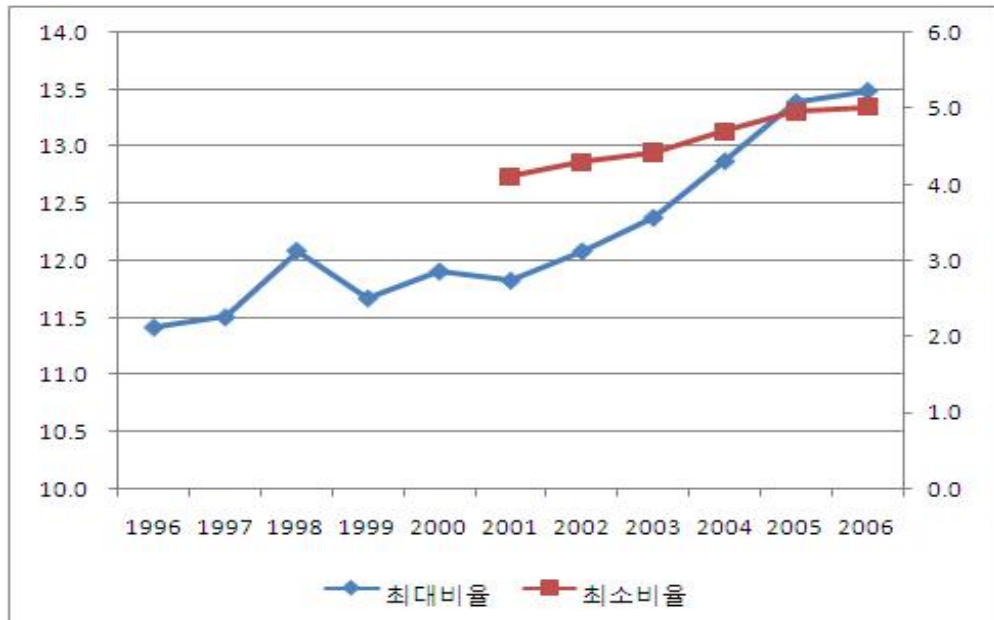
2)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혜원(2009)를 참조.

IV. 제3섹터의 고용 증가

이 장에서는 좀더 긴 시계열을 확보하여 제3섹터의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지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제3섹터 취업자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가 [그림 1]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최대비율과 최소비율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최대비율은 공공행정 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영리 부문이 아닌 취업자 전체를 분자로,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원자료의 취업자수를 분모로 하여 계산한 것이다. 정부 부문까지 포함된 값이라는 점에서 최대비율이라고 이름붙였다.

최소비율은 2001년부터의 값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2000년 이전에는 정부기관 공무원과 회사 이외 범인에 취업한 이들이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을 살펴 보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림어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통신업은 공공부문 또는 협동조합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를 제외하였다.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상술한다.

[그림 1] 제3섹터 취업자 비중의 변화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표 3〉 제3섹터 취업자수 증가

(단위 : %)

	1996~2000	2001~2006
총취업자 1 ¹⁾	0.4	1.4
총취업자 2 ²⁾	-0.7	1.5
최대	0.3	4.2
최소	-	5.6
정부기관	-	-3.2

주 : 1)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2)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기준.

최대비율과 최소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1년까지는 그다지 증가속도가 빠르지 않다가 2001년부터 매우 가파른 속도로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섹터 취업자의 빠른 증가는 취업자 증가율을 비교함으로써도 확인가능하다. <표 3>에서 시기별로 증가율을 비교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1년에 회사 이외 법인이 정부기관과 그 외 민간회사 이외 법인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시계열 단절이 있어서 1996~2000년과 2001~06으로 구분하였다. 총취업자 1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한 취업자인데 1996년과 2000년 사이 평균 증가율은 0.4%이고 2001년에서 2006년 사이 평균 증가율은 1.4%이다. 총취업자 2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의한 취업자인데 두 시기 각각 -0.7%와 1.5%이다. 1996년에서 2000년 사이 기간에는 외환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측면에서 오히려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2001년에서 2006년 사이 제3섹터 취업자수는 전체 취업자수와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최대값으로 측정했을 때 연율 4.2%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최소값으로 측정했을 때도 5.6%의 증가율로 빠르게 증가했다. 최대값에는 정부기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 정부기관 증가율인데, 보는 것처럼 동기간 사이에 정부기관 취업자수는 오히려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최소값을 비교할 때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취업자수와 회사 이외 법인 취업자수에 이상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 4>에 교육서비스업을 제시하였는데 2001년과 2005년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교육서비스업에서의 2001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취업자가 15만 명이었는데 2005년 갑자기 48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민간 학교법인 등의 취업자는 48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의 공무원은 대부분 각급 국공립학교에서의 교원과 직원을 의미한다. 만약 학교 교사수에 이러한 심대한 변화가 있었다면 2001년과 2005년 사이에 사학의 국공립화와 같은 큰 제도적 변화가 발생한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표 4〉 교육서비스업에서 조직유형별 취업자수 변동

	개인사업체	국가 등	비법인단체	회사법인	회사 이외 법인	전 체
2001	271,008	151,901	10,747	73,249	478,080	984,985
2005	317,745	479,845	25,513	92,982	270,800	1,186,885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원자료, 2001, 2005.

실제로 해당 기간 사이에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취업자 추이가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국공립학교 교원과 직원수에 대한 통계자료를 찾아 비교해 보았다. <표 5>는 교육통계연보 각년호에서 국공립학교의 교원과 직원, 사립학교의 교원과 직원의 총수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01년과 2005년 사이에 국공립학교 교직원수에 그다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2001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교육서비스업의 조직유형 분류에 오류가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2001년 조사에서 사립학교의 취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취업한 것으로 잘못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교육서비스업의 조직유형 분류를 그대로 이용해서 계산할 경우 2001년과 2006년 사이 고용 증가가 거의 없다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소비율을 계산할 때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것이다.

현재로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체에서 개별 사업장의 오분류의 문제를 수정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총계적 차원에서 수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표 5>의 국공립 교직원수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정부기관의 취업자수의 참값이라고 가정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회사 이외 법인의 취업자수에서 <표 5>의 국공립 교직원수를 빼서 새로운 회사 이외 법인의 취업자수를 계산해 낼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제3섹터 취업자의 수를 계산하면 2006년 기준 전체 산업에서 153만여 명이 제3섹터에 일하며, 협동조합과 공기업이 주로 포진된 산업을 제외할 경우 118만여

〈표 5〉 교원과 직원의 변화

	공공	비영리	전 체
1999	335,461	179,695	515,156
2000	335,846	182,242	518,088
2001	340,681	183,977	524,658
2002	357,216	190,366	547,582
2003	371,010	192,111	563,121
2004	379,189	195,334	574,523
2005	387,673	198,132	585,805
2006	397,716	200,267	597,983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호.

〈표 6〉 다양한 기준에 의한 제3섹터의 고용 비중 변동 추정치

(단위: %)

	전체 산업		일부 산업 제외	
	사업체 ¹⁾	경황 ²⁾	사업체 ¹⁾	경황 ²⁾
2001	8.4	6.3	5.6	4.2
2002	8.6	6.4	5.6	4.2
2003	8.8	6.6	5.9	4.4
2004	9.2	7.0	6.1	4.6
2005	9.8	7.5	6.5	5.0
2006	9.9	7.7	6.6	5.1

주: 1)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취업자수를 분모로 사용함.

2)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수를 분모로 사용함.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명이 제3섹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것을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수에 대비해 볼 때 2006년 현재 최대 6.6%, 최소 5.1%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과 비교해 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수 대비 최소한 4.2%에서 5.1%로 1%p 증가하여 매우 빠른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자수 증가율로 비교해 보면 연간 증가율이 4.9~5.7%를 시현하고 있어 전체 취업자수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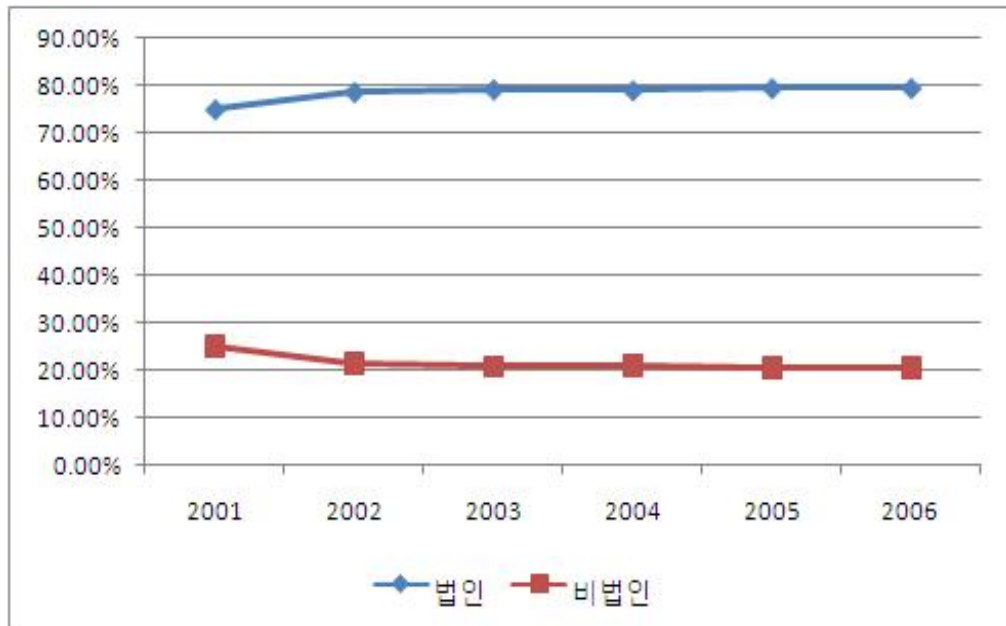
V. 제3섹터의 고용창출의 특징

1. 공식 조직의 주도성

조직형태 문항은 크게 다섯 가지 세부 부문으로 나뉜다. 영리 부문은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3섹터는 비법인단체와 회사 이외 법인으로 구분된다. 개인사업체와 비법인단체는 공히 비공식성이 강하고 회사법인과 회사 이외 법인은 공식성이 강하다. 지난 10여년간 공식 조직이 증가하고 비공식 조직의 비중이 줄어드는 양상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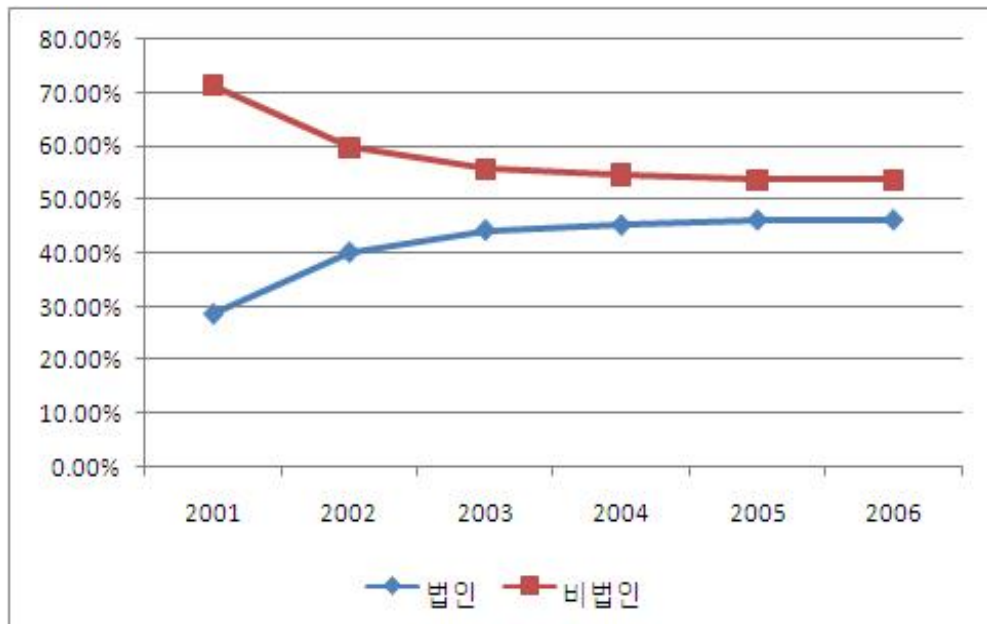
영리 부문의 경우 2001년과 2005년 사이 개인사업체 취업 인구가 200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이에 비해 회사법인의 취업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영리 부문 중 회사법인에 의한 고용 비중이 2001년 45%에서 2006년 48%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2] 제3섹터 내 공식/비공식 조직의 비중 변화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그림 3] 기타공공수리 영역에서의 공식/비공식 조직의 비중 변동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법인 중심의 취업자 증가는 제3섹터에서도 확인된다. 2001년과 2005년 사이에 제3섹터에서 나타난 특기할 사항 중 하나는 비법인단체의 비중이 감소하고 회사 이외 법인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2001년에는 비법인단체의 취업자 비중이 25%였는데 2005년에는 20%로 5%p 감소하였다. 비중으로 볼 때 1/5이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것은 회원단체 영역이다. [그림 3]에서 본 바와 같이 회원단체 영역에서 비법인의 비중이 71%에서 54%로 대폭 감소하였다.

2. 산업간 변동과 산업 내 변동

2006년과 2001년 사이 32만개의 일자리가 제3섹터에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일자리가 어떤 산업에서 주로 만들어졌는지 검토해 보자. <표 7>은 대분류 산업별로 2001년과 2006년 사이 어떻게 일자리가 변동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일자리 창출은 교육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에서 이루어졌다. 이들 두 산업은 제3섹터 전체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양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3섹터 일자리 구성에서 교육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교육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이 전체 제3섹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지 않지만 일자리 창출량에서 이들 두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고 있다.

대조적으로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은 제3섹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오히려 순일자리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 22만 명이 종사하고 있었는데 2006년에는 21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기타공공수리업 제3섹터 취업자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회원단체이며 이 영역에서 취업자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회원단체에서 취업자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 가지 가설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변화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민주화의 정착으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의 권익옹호기능(advocacy role)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 하듯 같은 시기 복지서비스는 4만 6천 명에서 9만 5천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각 산업에서의 제3섹터 취업 증가는 산업 내에서의 제3섹터 취업자 비중의 증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18개 대분류 산업 중에서 비중이 감소한 산업은 5개로서 어업, 건설업, 통신업, 공공행정업, 기타업 등이다. 기타업 중에는 회원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들의 고용규모가 줄어든 것이 특기할 만하다.

〈표 7〉 산업별 제3섹터 취업자 변동

	2001	2006	차이 1	구성비 1	차이 2	구성비 2
A	17,910	18,994	1,084	0.3		
B	8,409	2,419	-5,990	-1.8		
C	1,348	2,858	1,510	0.5		
D	23,922	26,418	2,496	0.8	2496	0.9
E	13,551	27,924	14,373	4.4		
F	6,475	7,926	1,451	0.4	1451	0.5
G	23,944	31,257	7,313	2.2	7313	2.6
H	4,652	6,081	1,429	0.4	1429	0.5
I	33,085	55,810	22,725	6.9	22725	8.0
J	6,328	993	-5,335	-1.6		
K	157,291	159,591	2,300	0.7		
L	102,502	136,617	34,115	10.4		
M	45,838	89,349	43,511	13.3	43511	15.2
N	9,618	0	-9,618	-2.9	-9618	-3.4
O	301,591	410,726	109,135	33.3	109135	38.2
P	207,984	306,387	98,403	30.0	98403	34.5
Q	20,296	36,515	16,219	4.9	16219	5.7
R	222,707	215,275	-7,432	-2.3	-7432	-2.6
	1,207,451	1,535,140	327,689	100.0	285632	100.0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표 8〉 산업별 제3섹터 비중의 변동

	2001	2006	차 이
A	73.3	73.9	0.6
B	60.0	40.2	-19.9
C	6.3	15.5	9.2
D	0.7	0.8	0.1
E	20.7	41.4	20.8
F	1.0	0.9	-0.1
G	0.9	1.3	0.3
H	0.3	0.4	0.1
I	3.9	6.3	2.4
J	4.0	0.7	-3.3
K	24.3	25.8	1.5
L	28.9	32.9	4.0
M	6.3	7.6	1.3
N	1.7	0.0	-1.7
O	29.8	33.0	3.2
P	42.0	44.0	2.1
Q	6.4	9.7	3.3
R	29.3	26.3	-3.0
전 체	8.4	9.9	1.5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제3섹터 비중이 높은 산업 중에서 기타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3섹터 비중이 더욱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의 산업에서 큰 폭의 비중 증가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런 점에서 제3섹터 비중과 관련된 산업간 수렴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2001년에 제3섹터 취업자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5년 사이에 그 비중이 낮아지고 비중이 낮았던 산업일수록 높아지는 형태의 수렴현상은 관측되지 않는다.

산업 중에는 제3섹터가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산업도 있다. 만약 제3섹터가 강점을 발휘하는 산업 자체가 성장한다면 산업 내 제3섹터 비중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그 산업의 비중 증가로 인해 전체에서 제3섹터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산업간의 비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서 각 산업 내에서 제3섹터의 경쟁력이 높아져서 고용 비중이 증가할 수 있다. 경제 전체의 제3섹터의 취업자 비중 증가는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난다. 과연 제3섹터가 증가한 원인이 제3섹터가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의 성장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산업 내부에서 제3섹터의 비중이 고르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요인을 수량적으로 분해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제시한다.

X 가 전체 취업자 중 제3섹터에 속한 사람의 비중이고 Y 가 취업자 숫자일 때 t 년도와 $t+1$ 년도의 일자리 창출은 $X_{t+1}Y_{t+1} - X_tY_t$ 로 쓸 수 있다. 두 연도 사이의 일자리 창출을 분해하면 다음의 식과 같이 두 개의 요소로 분해할 수 있다.

$$\begin{aligned} X_{t+1}Y_{t+1} - X_tY_t &= (X_{t+1}Y_{t+1} - X_tY_{t+1}) + (X_tY_{t+1} - X_tY_t) \\ &= \Delta X_t Y_{t+1} + X_t \Delta Y_{t+1} \end{aligned}$$

첫번째 항은 제3섹터 비중의 변화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고, 두번째 항은 주어진 비중하에서 총취업자수에 의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32만 명의 일자리 증가 중에서 72%에 해당하는 23만여 명이 비중 증가에 의해 설명되고 전체 취업자 증가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28%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제3섹터 비중은 어떻게 해서 증가하게 되었는가? 우선 제3섹터 비중 X 를 풀어쓰면 아래의 식과 같이 sx 의 합으로 볼 수 있다. 이때 Y_{jkt} 는 시점 t 에서 산업 k , 조직유형 j 에 취업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S_{kt} 는 전체에서 산업 k 의 취업자 비중을 의미하며 X_{jkt} 는 산업 k 내에서 제3섹터의 비중을 의미한다.

$$\begin{aligned}
 X_t &= \frac{\sum_k Y_{1kt}}{\sum_j \sum_k Y_{jkt}} \\
 &= \sum_k k \left(\frac{\sum_j Y_{jkt} Y_{1kt}}{\sum_j \sum_k Y_{jkt} \sum_j Y_{jkt}} \right) \\
 &= \sum_k s_{kt} x_{1kt}
 \end{aligned}$$

제3섹터 취업자 비중의 분해는 아래의 식과 같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bar{s}_{kt} 는 산업 k 에서 두 시점 사이의 평균 해당 산업 비중을 의미하며 \bar{x}_{kt} 는 산업 k 에서 두 시점 사이의 평균 제3섹터 비중을 의미한다. \bar{X}_t 는 경제 전체에서의 제3섹터 비중의 두 시점 평균값을 의미한다.

$$\Delta X_t = \sum_k \bar{s}_{kt} \Delta x_{kt} + \sum_k (\bar{x}_{kt} - \bar{X}_t) \Delta s_{kt}$$

우변의 첫번째 항은 주어진 산업 비중하에서 산업 내 제3섹터 비중의 증가가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것을 산업 내 효과(within-industry effect)라고 부른다. 두번째 항은 주어진 제3섹터 비중하에서 산업 자체의 비중이 커진 것이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것을 산업간 효과(between-industry effect)라고 부른다.

이 방법 이외에도 교차항을 넣어서 분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아래의 식이 분해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로 앞선 분해방법과 유사하며 차이가 나는 것은 평균값을 사용하지 않고 시점 t 에서의 값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Delta X_t = \sum_k s_{kt} \Delta x_{kt} + \sum_k (x_{kt} - X_t) \Delta s_{kt} + \sum \Delta x_{kt} \Delta s_{kt}$$

<표 9>는 대분류 산업 수준에서의 요인분해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3섹터가 강한 산업이 증가한 효과가 50% 내외를 설명하고 각 산업 내부에서 제3섹터가 성장한 것이 50% 내외를 설명한다.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제3섹터의 고용창출은 한편으로는 제3섹터가 비교우위를 갖는 보건복지업이나 교육서비스업의 확대에 힘입은 바 크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산업 내부에서 제3섹터의 경쟁력이 점차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두번째 분해방법을 사용한 경우의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방법 2에서 교차항이 설명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며 산업 내 효과와 산업간 효과는 거의 절반씩 제3섹터 취업자 비중의 증가를 설명한다.

〈표 9〉 제3섹터 비중 변화의 요인분해(대분류 산업)

(단위 : %)

비중 변화량 ¹⁾	방법 1		방법 2		
	산업내	산업간	산업내	산업간	교차항
1.52	0.76	0.76	0.72	0.71	0.09
	(50.0)	(50.0)	(47.4)	(46.7)	(5.9)

주 : 1) 비중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의 총취업자수를 분모로 사용하여 계산함.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표 10>은 보다 좁은 범위의 산업에 한정하여 협의의 제3섹터를 구성한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변동요인을 분해했을 경우 산업간 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3섹터 비중이 높은 산업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취업자가 늘어난 효과가, 각 산업 내부에서 제3섹터의 비중이 높아지는 효과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이다.

<표 11>은 중분류 산업 수준에서의 요인분해 결과이다. 대분류 산업을 고려했을 때에 비해 중분류 산업 기준으로 분해했을 경우 산업간 구성효과가 설명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산업 내 비중 증가 효과가 설명하는 비중이 커졌다.

보건복지업을 좀더 세분하여 보면 복지서비스업에서 제3섹터의 확대가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보건업에서는 제3섹터의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다. 사업서비스업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3섹터의 비중에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분하여 보면 연구개발업에서 제3섹터의 축소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제3섹터 비중 변화의 요인분해(대분류 산업, 일부 산업 제외)

(단위 : %)

비중 변화량 ¹⁾	방법 1		방법 2		
	산업내	산업간	산업내	산업간	교차항
1.40	0.53	0.87	0.50	0.82	0.08
	(37.9)	(62.1)	(35.7)	(58.6)	(5.7)

주 : 1) 비중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의 총취업자수를 분모로 사용하여 계산함.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표 11〉 제3섹터 비중 변화의 요인분해(중분류 산업)

(단위 : %)

비중 변화량 ¹⁾	방법 1		방법 2		
	산업내	산업간	산업내	산업간	교차항
전체 산업 (1.52)	0.90	0.62	0.86	0.59	0.07
	(59.2)	(40.8)	(56.6)	(38.8)	(4.6)
일부 산업 (1.40)	0.70	0.70	0.66	0.67	0.07
	(50.0)	(50.0)	(47.1)	(47.9)	(5.0)

주 : 1) 두 비중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포괄산업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임.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3. 고용형태 구성의 변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종사자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일종사자, 무급종사자 등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자영업주는 동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체의 소유주를 말한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영업주의 가족으로서 정상작업(영업)시간의 1/3 이상 종사하나 봉급 혹은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상용종사자는 1년 이상 고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하며, 자영업주를 제외한 모든 유급임원도 여기에 포함한다. 임시 및 일일종사자는 1년 미만 고용되었거나 일일수당제로 고용된 자를 말한다. 무급종사자는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로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외판원, 배달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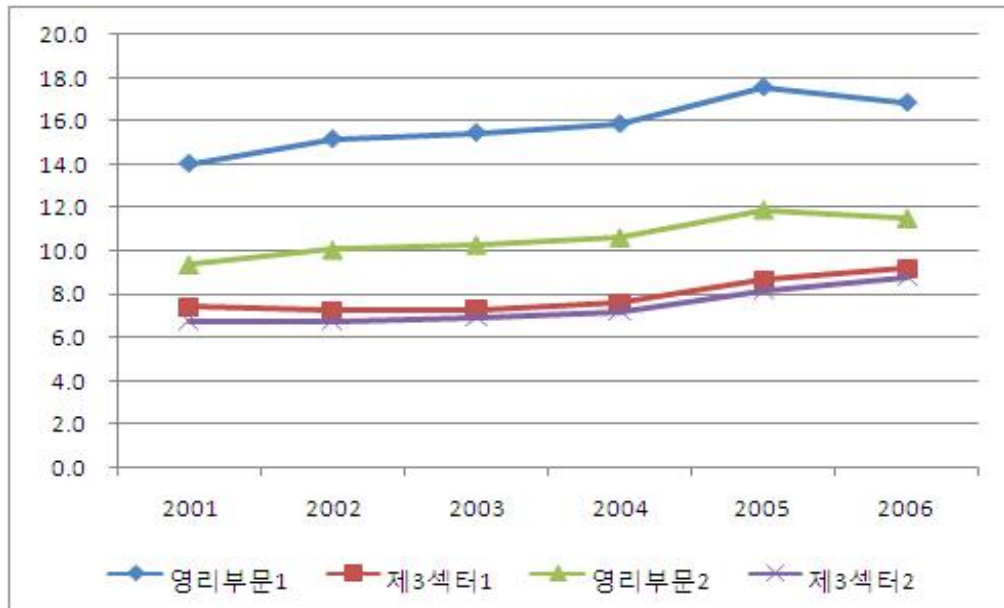
비정규직이라고 불리는 고용형태와 이러한 다섯 가지 분류는 1 대 1로 대응되지 않는다. 상용종사자는 무기계약근로자뿐만 아니라 1년 이상의 기간제 계약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준과도 약간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임시 및 일일종사자의 비중이 정규직 이외의 근로자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소절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고용형태 구성을 살펴본다. 특히 본 소절의 주요 목적이 비정규직 고용이 어떤 수준인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이 어떤 추세로 늘어나는지를 보고자 함이기 때문에 임시 및 일일종사자의 비중의 추이를 보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쟁점이 되는 것은 비중을 계산할 때 무엇을 분모로 사용해야 하는지이다. 본 분석에서는 두 가지의 분모를 사용하여 두 가지 비중을 계산·비교하였다. 첫번째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무급종사자를 제외하고 상용종사자와 임시 및 일일종사자만을 합한 취업자이다. 둘째는 위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종사 형태를 모두 합한 전체 취업자이다. 전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영리 부문에는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은 데 비해서 제3섹터에는 자영업자가 없는데 이를 단순비교하는 것이 갖는 문제점 때문이다. 영리 부문의 비정규직 비중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 이런 점에서 가능한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를 함께 비교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체 산업을 포함하지 않고 협동조합과 공공부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산업을 제외하였으며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체와 회사 이외 법인의 분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된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하였다.

[그림 4]에서는 두 가지 분모를 사용하여 영리 부문 및 제3섹터의 임시 및 일일종사자 비중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자영업자나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경우와 포함한 경우를 비교하면 확실히 영리 부문의 경우 좁은 의미의 근로자에 한정할 때 임시 및 일일종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제3섹터의 경우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림 4] 임시 및 일일종사자 비중의 추이



주: 영리 부문 1, 제3섹터 1에서는 분모를 상용종사자와 임시 및 일일종사자만을 합한 취업자수를 사용하였고, 영리 부문 2, 제3섹터 2에서는 전체 취업자수를 사용하였음.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2000년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큰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증가 문제가 영리 부문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과 비교할 때 2006년에 임시 및 일일종사자의 비중이 제3섹터와 영리 부문 공히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제3섹터 고용 증가를 비정규직의 증가가 주도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 전체 늘어난 취업자수의 14%만이 비정규직이 설명하고 나머지 86%는 정규직의 증가가 설명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비중의 변화는 산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 12>에는 2001년과 2006년 사이 산업별 비정규직 비중 변동을 보여준다. 가장 크게 증가한 산업은 오락문화운동업으로서 원래 매우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5년 사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숙박음식업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측된다.

주목을 끄는 것은 보건복지업과 회원단체업이다. 보건복지업의 제3섹터는 2001년 기준 가장 낮은 비율의 비정규직 활용을 보여주었는데 5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그 활용도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4.6%에서 7.1%로 증가하였다. [그림 5]에서는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보건복지업에서 영리 부문과 제3섹터의 비정규직 활용률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영리 부문의 경우 거의 변동이 없는 데 비해서 보건복지업에서는 빠른 속도로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였다. 회원단체업은 오히려 비정규직의 비중이 줄어드는 양상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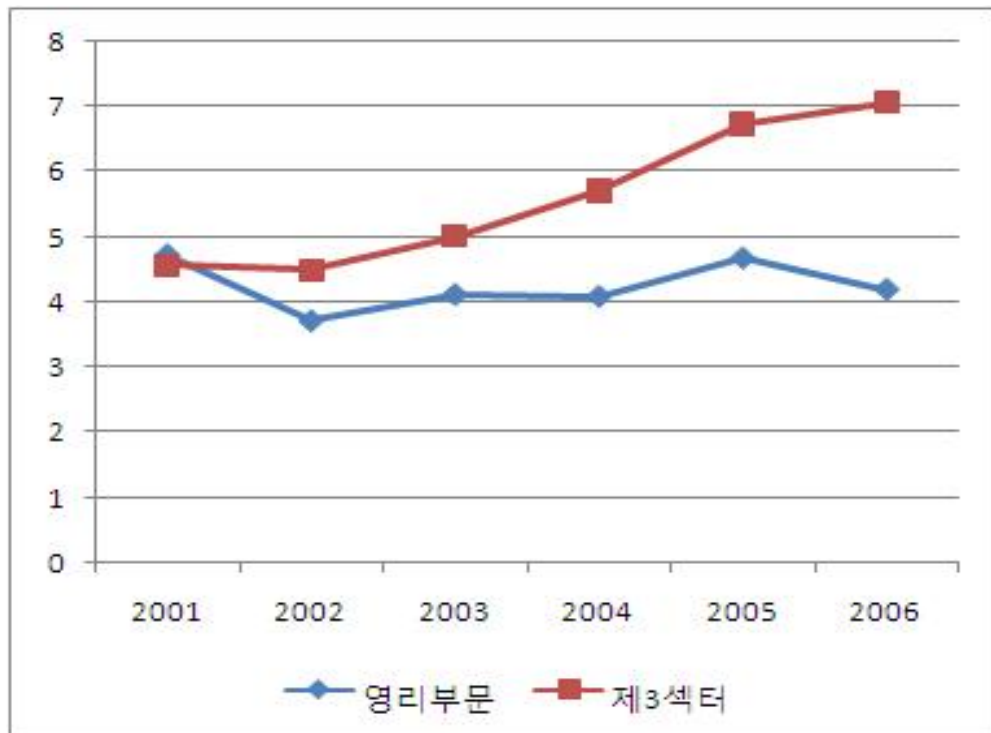
〈표 12〉 제3섹터의 산업별 임시 및 일일종사자의 비중 변동

	2001	2006	차이
D	16.1	16.8	0.7
F	7.6	7.5	-0.1
G	16.2	18.0	1.9
H	17.1	20.3	3.2
I	6.9	11.6	4.7
M	11.7	10.8	-0.9
P	4.6	7.1	2.5
Q	21.9	29.8	7.9
R	5.5	4.7	-0.8
전 체	7.4	9.2	1.8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3섹터 내에서 보건복지업의 고용창출이 매우 활발하였고 이에 비해 회원단체에서는 고용창출이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용창출이 빠르게 진행된 보건복지업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향후 추이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림 5〉 보건복지업에서의 임시 및 일일종사자 비중 변동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VI. 결론

이 글에서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제3섹터의 고용규모를 추정하였다. 2006년 자료를 이용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분류를 감안할 때 108만 명 내외의 사람들이 제3섹터에 취업하고 있다. 2007년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추정에 따르면 협동조합과 공공부문 등을 제외할 경우 82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비농 취업자 대비 비율을 구하면 3.8~5.1% 내외의 사람들이 제3섹터에 종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태규(2006)의 결과에 비해 크고 전승훈(2009)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와 유사하거나 약간 작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제3섹터의 취업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3섹터는 영리 부문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년 사이 늘어난 일자리는 150여 만개인데 이 중에서 제3섹터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30여만개 정도이다. 제3섹터가 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일자리 창출에서 20%를 차지하는 제3섹터의 고용창출은 매우 인상적이다. 2001년과 2006년 사이 취업자 증가율은 전체 취업자 증가율의 세 배를 웃돌았다.

산업 측면에서 볼 때 보건복지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제3섹터의 고용창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회원단체에서는 오히려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분류 산업 기준으로 요인분해를 해보면 비영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산업의 규모가 커진 구성효과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다. 중분류 기준으로 요인분해를 했을 때는 구성효과의 영향력이 다소 약화된다. 추가적으로 제3섹터의 공식 조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비정규직의 증가가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본 연구가 갖는 결정적 한계점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등의 자료의 조직유형 분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공공부문을 제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 100여만 명 이상이 제3섹터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으나 이 중에서 제외되지 않은 공공부문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지는 남은 과제이다. 하지만 제Ⅳ장과 제Ⅴ장의 고용 증가의 방향과 양상에 대한 분석은 공공부문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본 연구는 좀더 세분된 산업 수준에서 제3섹터의 고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분된 산업 수준에서 제3섹터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좀더 정밀한 제3섹터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향으로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업체 수준에서 어떠한 특성이 고용창출에 효과적이었는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KL**

<참고문헌>

- 박태규(2006), 「한국 비영리 단체의 산출물 측정과 경제적 의미에 관한 연구」, 『국민계정』, 한국은행.
- 박태규·정구현(2002), 「한국 비영리 부문의 규모추계와 구조」, 『한국비영리연구』 1(2).
- 엄형식(2008),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정책연구원.
- 전승훈(2009), 「제3섹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이동」, 미발간논문.
- 김혜원(2009), 「영리 부문과 제3섹터의 임금격차」, 미발간논문.